

북한 경제개발모델의 모색

##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권 율\*

- I. 머리말
- II. 경제개혁의 초기조건
- III.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
- IV. 개혁·개방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 V.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요 약

개혁초기 급진적 개혁방식을 도입했던 베트남은 경제적 초기조건과 발전단계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점차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개혁정책을 전환해 왔다. 특히 정치적 안정하에 순조롭게 개혁·개방체제를 달성함으로써 현재 베트남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전면적인 경제개혁 직전단계에서 추진된 베트남식의 신경제정책 및 이에 뒤이은 가격, 임금, 화폐개혁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체제가 온존하는 가운데 추진된 부분적인 자유화조치는 베트남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개혁 초기단계에서 북한은 체제안정을 우선과제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의 순서를 고려하면서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진주의적 개혁론이 주장하는 미시적 제도개혁의 선행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시장경제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규모 자금지원을 위한 자원방안 마련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경제학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서남아팀장

## I. 머리말

그동안 체제전환문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전략 및 개혁정책의 유효성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그 주된 이유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구소련 및 동구권은 물론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이행기 경제(economies in transition)의 초기조건에 따라 개혁의 추진방식과 속도, 이행의 경제적 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국가에 있어서 개혁의 속도와 이행순서(sequence)를 둘러싸고, 급진적·포괄적인 개혁으로서 빅뱅(big bang)을 주장하는 급진주의와 단계적·부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진주의(gradualism) 중에서 어느 쪽이 시장도입 전략으로서 적절한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sup>1)</sup> 특히 가격자유화, 거시경제의 안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개혁 프로그램의 기본내용과 이행순서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급진적 개혁론의 경우 구조조정의 핵심을 민영화로 설

정하고, 쇼크요법(shock therapy)에 의한 즉각적인 이행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에 점진적 개혁론은 민영화보다는 경제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베트남의 경우 개혁초기 가격자유화와 경제안정화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여타 체제이행 국가들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베트남의 시장경제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영기업 개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기업매각과 같은 사유화보다는 국영기업의 체질강화에 역점을 둔 기업개혁과 주식화제도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개혁초기 경제개혁의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이행전략이 기본적으로 점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의 베트남의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전제로 한 베트남의 개혁정책 추진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급진주의적 처방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

1) 급진적 개혁론은 Lipton & Sachs(1990), Blanchard, Dornbusch, Krugman, Layard & Summers (1991), Fisher & Gelb(1991), Dornbusch & Wolf(1992) 등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지해 왔고, 점진적인 개혁을 옹호하는 McMillan & Naughton(1993, 1996), McKinnon(1993), Rybczynski(1991) 등은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권율(1999), pp. 142~143 참조.

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잔존해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급진적 처방으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 경제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의 개혁·개방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추진된 이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수준과 방향을 둘러싸고 그동안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7·1조치 관련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시각과 분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은 북한의 개혁단계와 향후 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전면적인 경제개혁 직전단계에서 추진된 신경제정책(1980~82) 및 이에 뒤이은 가격, 임금, 화폐개혁(1985)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체제가 온존하는 가운데 추진된 부분적인 자유화조치는 베트남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개혁초기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에 중점을 두고, 개혁의 추진방식 및

속도, 이행전략과 재원조달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개혁방향과 체제전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행의 속도와 추진방식을 베트남과 비교·분석하고, 북한의 개방노선과 경제개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을 핵심적 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전략과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베트남 사례가 북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고, 북한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에 대한 주요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경제개혁의 초기조건

베트남은 1975년 남북통일 이후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집단농장 및 국영기업을 주된 생산활동단위로 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그동안 제도적 변환을 거쳐 왔고,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도입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메카니즘의 유산에 의하여 상당기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이행기 경제의 기본적 특징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베트남식의 '신경제정책(New Economy Policy: NEP)'은 1979년 제6

회 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제2차 5개년계획(1976~80년)이 종료되기도 전에 신경제정책을 시급히 채택하게 된 것은 베트남경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표 1〉 참조).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남북통일이후 농업부문을 공업부문으로 급속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획경제하에 사회주의적 공업화노선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집단화와 공업부문의 국영화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누적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베트남은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신경제정책과 같은 부분적 자유화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유화조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일종의 혼합경제(mixed economics)를 의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경제체제가 온존하는 가운데 추진된 부분적인 자유화조치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 1. 신경제정책 : 부분적인 경제개혁

남북통일이후 베트남은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에 의한 사회주의 공업화노선과 함께 농업의 집단화정책을 중심으로 남베트남에 대해 급속한 계획경제시스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남부농민들의 집단

적 반발과 국영기업체제 중심의 공업화노선이 실패하면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식의 신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 중소기업, 소매업, 수공업 등 소규모 민간부문의 생산방식을 장려함으로써 비국영부문의 생산활동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통일이후 급속히 추진된 사적부문의 국유화, 집단화정책을 수정하여 개인적 소규모 생산방식을 허용한다는 정책은 시장경제메커니즘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하에서의 자원배분메커니즘을 그대로 둔 채 시장을 통한 생산유인을 확대한다는 것이어서 부분적인 개혁조치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당국에 의한 물자의 배급제도와 보조금제가 유지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하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자유화조치는 국영기업의 만성적인 적자누증으로 귀결되었다.<sup>2)</sup> 즉 보조금제도가 온존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국영기업 개혁조치가 도입되어 경제불안정이 확대되자 다시 정책은 보수적으로 선회하게 되었다(〈표 1〉 참조).

결국 1983년 이후 계획경제노선은 강화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보수화의 영향으로 민간상업

2)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기본개념은 Kornai(1980)를 참조하고,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Raiser(1997), pp. 30~33 참조

〈표 1〉 베트남경제의 시기구분과 주요 정책변화

시기구분	경제개발계획	주요정책	성과 및 문제점
계획경제수립기 (1954~65년)	3개년 계획 (1958~60년)	· 토지개혁 실시 · 집단농장화	· 국유화, 집단화 실시 · 토지개혁, 국유제 수립 · 남부와 체제분리
	제1차 5개년 계획 (1961~65년)	· 국유기업체제수립 · 중화학공업의 육성	· 대외원조와 기술의 부족 · 대미전쟁 격화(1964)
전시관리체제	전쟁으로 계획 중단	· 남베트남의 사회주의 개조 · 중화학공업육성	· 투자부진, 전비부담, 자연재해로 목표달성 부진
사회주의적 경제통제기 (1976~79년)	제2차 5개년 계획 (1976~80년)	· 농업의 집단화와 식량가격 통제 실시 · 국제경제기구가입 · 캄보디아 침공(1978.12)	· 남북통일(1975) · 제4차 당대회(1976) · 남부사회주의 개조실패 · 중·월 분쟁(1979.2)
신경제정책시기 (1980~82년)	제3차 5개년 계획 (1981~85년)	· 경작자유권 확대 (최종생산물 계약제) · 국영기업의 자율권확대 · 임금가격제도의 도입 · 유통제도개선과 자유화	· 식량자급, 생산성증가 · 초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증대 · 신경제정책 실패로 재통제 강화
재통제시기 (1983~85년)		· 유통과 분배의 재통제 · 남부 농업집단화 재강화 · 상공업세법수정	· 자유시장제한 · 사적경제활동억제 · 가격, 임금, 화폐개혁(1985)
다부문경제체제 수립기(도이머이 1단계, 1986~91)	제4차 5개년 계획 (1986~90년)	· 식량, 소비재, 수출산업 육성 · 대외개방정책 · 농업개혁 · 외국인투자유치촉진 · 가족단위 농업장려	· 제6차 당대회(1986) · 식량증산, 쌀수출 · 다부문경제체제 수립 · 실업증가 · 동구권, 소련의 원조중단
개방체제수립기 (도이머이 2단계, 1992년 이후)	제5차 5개년 계획 (1991~95) 제6차 5개년 계획 (1996~2000) 제7차 5개년 계획 (2001~05)	· 국영기업의 민영화조치 · 강력한 통화관리 · 공업화, 기간산업육성 · 외자법 개정 · 토지법 개정 · 외환시장 개설 · 국영기업법 제정	· 제7차 당대회(1991) · 헌법개정(1992년) · 외국인투자 활기 · 미국의 엠바고 해제(1995) · 안정적인 성장국면 진입 · 국제금융기관 융자재개 · ASEAN 가입(1995)

자료 : 필자작성

활동은 위축되고, 농업부문의 집단화작업은 다시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하에 보조금제도가 의존하는 연성 예산제약하에서의 부분적인 개혁조치로 베트남은 오히려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985

년 가격, 임금,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재정적자로 초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구소련으로부터 페레스트로이카의 바람이 불어 닥치자 구소련의 원조가 삭감되고 교역에서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대내적인 경제불안정이

보다 심화되게 되었다. 결국 베트남은 1986년 12월 개최된 제6차 전당대회에서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Doi Moi ; 쇄신) 노선을 채택하고, 분권적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2.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특징

베트남은 중국, 라오스 등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경험한 후 진농업사회로서 이행과 개발의 과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농업국가형 체제전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sup>3)</sup> 이에 따라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중국식의 개혁모델에 따라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이행 전략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초기조건을 중심으로 이행의 조건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중국과

는 달리 특징적인 몇 가지 측면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노동인구의 70%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은 과잉노동경제(labor surplus economy)로서 구소련 및 동구국가들과는 달리 국영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고(〈표 2〉 참조), 영세농에 기초한 촌락공동체가 주요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은 농업부문의 개혁을 기초로 한 점진적인 공급능력의 확대와 자본 축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을 보면, 농업부문의 제도개혁과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 향진기업에 의한 농촌공업화가 실현되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와 연계되면서 노동집약적 수출생산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과는 달리 농업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공업기반이 취약하고 대외의존적이어서 체제전환과 경제개발

〈표 2〉 베트남·중국·러시아의 경제구조 비교(고용비중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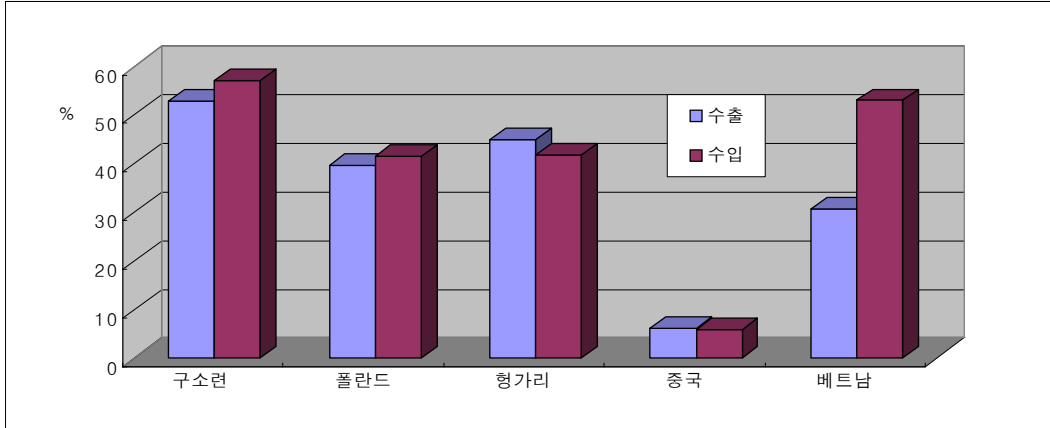
	베트남		중 국		러시아	
	1986*	1994	1978*	1994	1990*	1994
농 업	73	70	71	58	13	15
공 업	14	14	15	18	42	38
서비스	13	16	14	25	45	47
국영부문	15	9	19	18	90	44

주: 별표(\*)는 개혁 개시연도를 표시한 것임.

자료: 세계은행

3) 농업국가형 체제전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권율,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대한 고찰”, 『동남아시아 연구』, 한국동남아시아학회 제3호, 1999. 8, pp. 12~17 참조.

〈그림 1〉 체제전환국의 코메콘체제와의 교역의존도 비교



주 : 교역의존도는 1987~89 평균값을 활용하여 계산  
 자료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에 많은 장애요인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1975년에 걸친 약 30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1978년 이후 캄보디아 분쟁으로 인한 높은 전비부담으로 재정악화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통일 이후 1975년에서 1985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친 계획경제기간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여 매우 짧은 기간으로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확립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특히 베트남은 비록 사회주의 경제체제일지라도 자본축적과 산업생산체제가 안정화될 충분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은 물론 공업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또한

중국과는 달리 코메콘 체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구소련 및 동유럽과의 교역관계 단절은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그림 1〉 참조).

따라서 베트남은 개혁·개방노선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중국식의 내향적 발전보다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엄격한 지원조건을 준수하는 등 대외개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자금 유입이 시작된 1990년 초반이후에는 점차 개혁의 속도를 완화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전형적인 농업국가인 베트남에 있어서 체제전환과정은 다양한 경제개발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추진되던 급진적 처방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정책의 유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 Ⅲ.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

#### 1. 이행전략 : Small Bang

베트남은 구소련의 원조중단으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자 재정·금융개혁과 함께 전면적인 가격자유화조치를 단행하여 개혁초기에는 비교적 급진적 개혁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베트남은 실제로 1987년 각의 217호 결정에 의하여 정부통제품목 이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격을 시장가격화하고, 1989년 말까지 전력, 수도, 교통, 통신, 철강, 시멘트 이외의 품목은 모두 자유화함으로써 이중가격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물자배분메카니즘(material allocation mechanism)이 점차 축소·폐지되고, 경제분권화정책하에 재화시장 및 요소시장의 형성을 위한 제반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각 산업의 생산요소 구

입과 생산물 판매가격은 일부 기간산업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가격으로 전환되었다.<sup>4)</sup> 이와 같이 가격개혁은 농업생산물의 가격자유화로부터 환율의 실세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것이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농산물 저가정책을 위한 농산물 관리가격체제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에 의존했던 생산재가격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가격을 조정, 1989년 1/4분기까지 베트남 동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시장가격에 근접시킴으로써 수입품을 국제가격수준으로 인상시켰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가격자유화 조치는 중국이 19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급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경제개혁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80년대 도입된 신경제정책의 후유증과 구소련으로부터 원조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sup>5)</sup> 더욱이 개혁초기 주요 재정적자 보전수단인 구소련의 원조중단으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IMF와 세계은

4) 제유, 요소비료, 철강 등 구소련에 대부분을 의존하던 생산재가격도 1989년 구소련과의 교역이 경화거래로 전환되면서 대폭 축소됨에 따라 1990~91년 기간동안 국제가격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5) 1985년의 가격, 임금 및 통화개혁 이후 超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으로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었고, 동(dong)貨의 평가절하로 인해 물가불안은 1985년 가을부터 1988년까지 계속되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통화증발에 의존해 왔는데, M<sub>2</sub> 증가율이 1987~88년간 연평균 300% 이상을 기록하였다.



행 같은 국제금융기관과 주요 서방선진국들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표 3〉을 보면, 물가의 경우 개혁초기 수백%에 달해 초인플레이션을 나타냈으나, 높은 이자율과 긴축재정을 통한 단기조치에 의해 급등하던 물가가 1989년에는 연 34.7% 정도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재정 및 금융체제의 취약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고, 1990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 농업부문에 대한 신용공여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원조가 대폭 삭감되어 재정적자를 본원통화 발행으로 보전하였기 때문에, 개혁초기의 급진적인 개혁방식을 취했던 것은 구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IMF와 서방선진국의 외자지원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개혁 조치는 거시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 경제개혁조치가 실효를 거둬에 따라 생산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

를 미쳤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면서 자본축적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구소련 및 동국권 국가가 추진했던 것과 같은 민영화 정책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방식을 고수해 왔다.<sup>6)</sup>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부분적인 급진개혁(small bang)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정치개혁없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기본적인 개혁노선은 점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구가 70% 이상에 달하는 농업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과잉노동경제였고,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시장 및 자본시장 등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조건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반 개혁작업은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6) 1990년에는 국가의 재정자금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무부 산하에 국고(kao bac nha nuoc)가 설치되었다. 국고는 국가예산이 경상예산과 개발예산으로 분리되어진 1992년 이후 개발자금을 종래의 국가은행에 대신하여 장악하게 되고, 국영기업 개혁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었다.

7) 1989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자로는 세계은행 관계자들로 Leipziger(1992)과 Dollar(1993) 등이 있고, 급진개혁론자인 Woo(1996) 등이 있다. 반면에 베트남의 시장도입전략을 기본적으로 점진주의로 규정하는 Naughton(1996)은 베트남의 경제개혁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본격화된 시기를 1980년대 후반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급진적 개혁론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표 3〉 베트남의 거시경제지표 변화추이(1986~95)

(단위: %)

	실질GDP 성장률	물 가 상승률	재정적자 /GDP	무역수지 /GDP	M2 /GDP	M2 증가율	대미환율 (동/\$) <sup>1)</sup>
1986	n.a.	774.7	6.2	n.a.	0.19	n.a.	15
1987	3.7	231.8	4.7	n.a.	0.16	324.3	80
1988	5.9	393.8	7.6	n.a.	0.17	445.4	225
1989	8.5	34.7	10.3	n.a.	0.30	233.8	900
1990	5.1	67.5	8.0	n.a.	0.27	32.4	4,300
1991	6.0	67.5	3.7	2.9	0.27	78.8	5,000
1992	8.7	17.4	3.7	0.4	0.25	33.7	12,500
1993	8.1	5.2	6.2	-7.3	0.24	19.0	10,530
1994	8.8	14.4	2.6	-11.4	0.25	33.2	10,510
1995	9.5	12.7	1.5	-13.4	0.24	22.6	11,000

주 : 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각년호

자료 :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소(CIEM), 권율(1999), p. 18 재인용

소규모 이행경제는 개혁초기 구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서방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격자유화 및 재정·금융개혁을 본격화하는 등, 내자 및 화교자본의 지원이 가능했던 중국보다는 급속히 개혁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 2. 위로부터의 개혁 : 정치체제의 안정

베트남은 당 주도하에 점진적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소련 및 동구와는 달리 정치적 안정하에 사회주의적 경제부분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화하였다. 즉,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 상존하였으나, 베트남 공산당은 민족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호치민 사상에 근거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경제자유화에 주력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집단적 지도체제를 통한 정치안정 추구, 개혁이후 4번에 걸친 순조로운 세대교체 및 정치권력 이양을 통해 정치체제 안정화에 성공하였다. 현 지도부의 경우에도 지역·정치성향에 있어서의 권력 안배, 당서기장을 중심으로 한 3두체제는 베트남 특유의 정치적 안정을 추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 남부출신의 개혁파가 총리를 역임하면서 개혁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정치적 실세는 당과 군부가 장악해 왔다. 그러나 개혁정책이 확대되면서 내각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행정기능이 강화되고, 2001년 4월 18일 당중앙위원회에

〈표 4〉

베트남 지도부의 주요 약력 및 성향

	당서기장	대통령	총 리
	농 독 마잉 (Nong Duc Manh)	똌 독 루옹 (Tran Duc Luong)	판 반 카이 (Phan Van Kai)
출 생	1941년생, 64세	1937년생, 68세	1933년생, 72세
출 신 지 역	소수민족(타이족) 출신	중부 팡가이성	남부 호치민市
학 력	소련 레닌그라드 임업연구소	하노이 광산지질대학 모스크바 대학 지질학부	소련 국민경제대학
전 직	국회의장(1992년 이후)	부총리(산업정책 담당)	제1부총리
주 요 경 력	박타이성 인민위원장 당중앙위 위원(1989) 정치국 위원(1992)	베트남 지질총국장(79년)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87년이후 부총리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국가계획위 위원장 91년이후 제1부총리
성 향	소수민족 출신의 중도파로서 개혁성향	전형적인 관료출신, 청렴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중도파	개혁을 주도해 온 경제전문가 로서 개혁파

자료 : 필자작성

서 소수민족 출신의 농 독 마잉(Nong Duc Manh) 서기장이 결정되어 개혁체제는 더욱 공고화된 바 있다. 현재로선 당의 조직력을 통한 사회통제력이 행정기능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당의 사회통제력이 점차 비공식화되면서 실질적인 개혁의 추진력은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전제로 한 내각의 개혁정책 추진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혁정책이후 사회적 빈부격차 및 지역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 투자환경 및 시장경제 도입에 부분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미국과의 관계

개혁초기부터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경제제재조치(Embargo) 때문에 개혁·개방노선을 공표한 직후 몇 년간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캄보디아 침공(1978)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중·월전쟁(1979) 이후 지속되어온 전비부담, 구소련의 지원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도의 경제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던 베트남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되면서 국제금융기관 및 서방주요국과의 관계개선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야 했다.<sup>8)</sup>

그러나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

8) 미국은 베트남 공산화이후 국교단절과 함께 해외자산 관리규정, 미 수출입은행의 지원행위 금지규정, 원조금

수를 계기로 주요 서방선진국의 대베트남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1990년 8월부터 캄보디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도차이나 평화정착을 위해 베트남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캄보디아 평화정착 및 실종미군 문제(MIA) 해결을 전제로 베트남에 대한 관계정상화 일정을 제시한 바, 1991년 4월 미국무성 솔로몬 아·태담당 차관보가 베트남에 제안한 국교정상화를 위한 이행절차(Road Map) 4단계안은 미·월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접근법은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더욱이 캄보디아 평화정착 실현이후에도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베트남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에 평화적인 총선거체제가 구축되면서 미국은 예정대로 1992년 12월 임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1993년 7월 국제 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였다. 이후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세계은행의 주도하에 원조국회의(Donor Conference)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94년 2월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하고, 1994년 11월 초 시티뱅크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하노이 지점인가를 취득하였다.

베트남이 개혁노선을 추진한 지 만 10년 만에 미국은 베트남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는데, 1995년 8월 양국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도 최혜국대우(MFN)를 부여하는 무역협정 체결은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미국은 통상법 402조 잭슨·베닉 개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sup>9)</sup>에 의하여 베트남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금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시장 우회수출기로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우선 잭슨·베닉 개정조항 면제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1998년 8월 베트남을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수출입은행이 자국 민간기업의 베트남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 이후 미·월 무역협

지규정, 무역거래 허가규정, 수출통제규정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베트남과의 재화, 용역 및 기술교류를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 9) 민주당 상원의원 헨리 잭슨과 민주당 하원의원 찰스 베닉이 1974년 제안한 개정안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최혜국대우(MFN)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해당국이 자국민에 대해 이민의 자유를 거부하거나, 둘째, 이민 자체에 대해 명목세금 이상을 부과하거나, 셋째, 이민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하여 명목 과징금 이상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당시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한 나라는 베트남을 포함, 북한,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쿠바, 라오스 등 6개국이었다.

〈표 5〉 미·베트남 관계 주요일정

시 기	주요사건 및 내용
1975년 4월	베트남전 종결, 미-베트남 국교단절
1990년 8월	캄보디아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과 대화재개
1991년 4월	미국, 베트남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Road Map 제시
11월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교섭개시
1993년 7월	미국,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융자재개 허용
1994년 2월	클린턴 미대통령, 대베트남 embargo 전면해제 발표
1995년 7월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발표
8월	미국, 국무장관 방월, 베트남과 국교정상화 조인
1996년 5월	미·베트남 무역협정 협의 개시
5월	루빈 미재무장관 방월
1997년 5월	주베트남 미국대사 정식취임
6월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방월, 지적소유권 보호협정 조인
1998년 3월	미국, 잭슨-베닉조항 대상국에서 베트남 제외
9월	베트남, 캄 외무장관 방미
1999년 7월	미·베트남 무역협정 기본 합의
2000년 7월	정부간 무역협정 공식 합의
2001년 9월	미 하원 무역협정 비준, 베트남 인권법안 가결
10월	미 상원 무역협정 비준, 베트남 인권법안 보류
11월	베트남 국회 무역협정 비준
12월	미·베트남 무역협정 비준서 교환, 무역협정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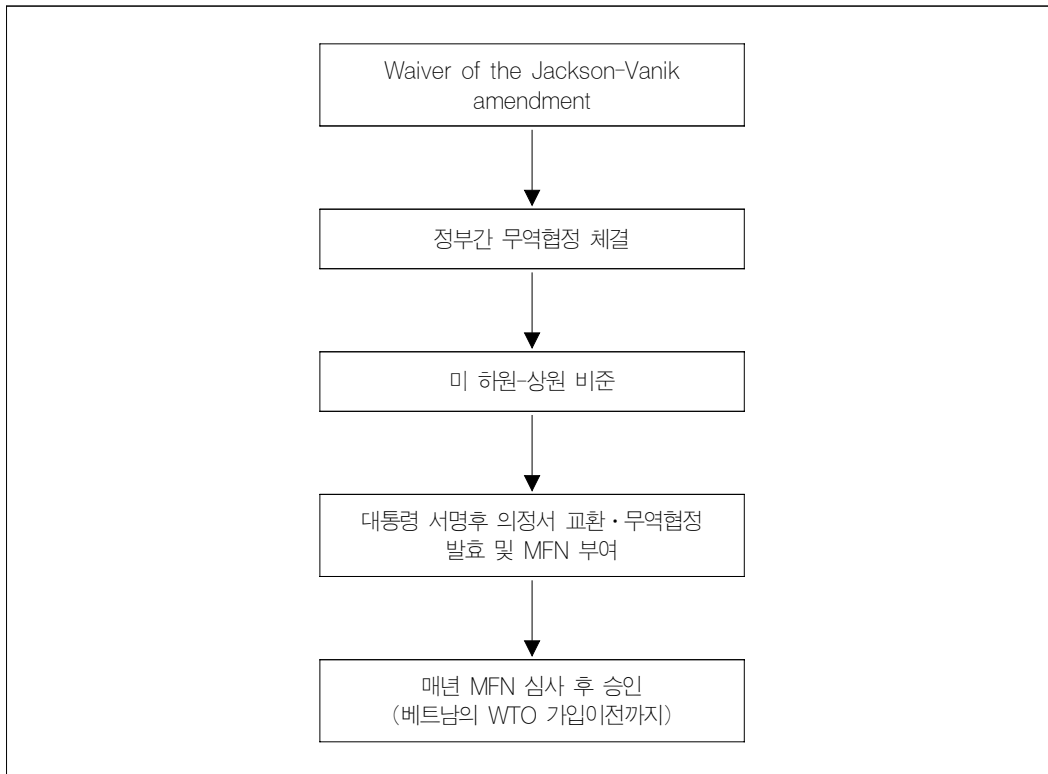
자료: 권율(2001), p. 30 재인용.

정체결 교섭이 9차례나 추진되면서 1999년 7월 무역협정 체결에 기본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경제개혁 확대요구에 베트남측이 반발하면서 공식 합의는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환경개선, 통신 및 서비스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견이 엇갈려 기본합의 이후에도 협정타결에 상당시간을 소요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의 통신, 금융, 유통 부문의 미기업 진출허용 요구에 일방적 양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1999년 연말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대내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베트남의 대미 강경자세가 약화됨으로써 2000년 7월 13일 양국간에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베트남으로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내수침체와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외자유치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2001년 9월초 미 하원에서 무역협정 체

〈그림 2〉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협정의 승인절차



결을 승인하면서 410대 1의 압도적 다수로 베트남에 대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베트남측의 반발로 미 상원 비준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인권법안 처리는 보류되었다. 2001년 10월 상원의 비준이 순조롭게 마무리됨으로써, 당시 집권말기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이 협정발효를 차기정권으로 이양함으로써 부시 행정부하에서 무역협정 의회비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 의회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과거 중국에 대해서 해왔던 것처럼, 매년 베트남에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sup>10)</sup> 지위를 갱신하면서 이를 시장개방조치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WTO 조기가입을 위해 2005년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 및 제정,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10) 미국의 무역법 개정(1998년)으로 미 정부는 최혜국(MFN) 대우조치를 NTR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MFN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본고에는 MFN과 NTR을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개혁·개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베트남은 2004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9차 가입작업반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2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의 WTO 가입에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베트남으로서는 금년말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담에서 가입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WTO 가입은 앞으로 2년간 유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미 EU와 작년 10월 양자협상을 마치면서 브라질, 칠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쿠바 등 총 6개국과 양자협상이 완료된 실정이다. 미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을 위해 베트남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것은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타결을 짓고 앞으로 호주,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협상 타결을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짓게 된다면, WTO 가입을 통해 매년 심사받게 되는 MFN 심사는 자동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베트남의 대미통상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 IV. 개혁·개방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 1. 경제개혁의 주요조치

베트남정부는 19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경제개혁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표 6〉 참조).

첫째,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정을 전제로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경제분권화를 강화하고 있다. 가격개혁과 함께 금융·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삭감과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조치가 추진되었다. 우선 재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고,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에 의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둘째, 국영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국영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존하는 다부문경제체제(multi-sector economy)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1)</sup> 점진적인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다부문 경제구조는 소유구조의 다원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의 비국영부문에 대한 규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급격한 소유구조의 개편보다는 거시경제적 안정에 바탕을 둔 제도 정비 및 규제철폐 등에 중점을 두어왔다.<sup>12)</sup>

11) State Planning Committee(1991), p. 10.

12)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국영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3년 3월 기업개혁위원

〈표 6〉

베트남의 부문별 주요개혁조치

	법제개혁	국영기업 개혁	재정·금융개혁
1987	외자법 제정 토지법 제정	자금조달을 재정에서 금융으로 전환 보조금 폐지 감가상각비 100% 유보	
1988	SCCI 설립	예금 및 대출금리 조정 감가상각비 50%를 국가에 재집중	은행개혁 - 상업은행 기능분화
1989	가격개혁 실시	국영기업 보조금 중단	
1990	외자법 1차 개정	회사법 제정(주식회사 설립규정) 사기업 제정	중앙은행법 세제개혁(1단계) -법제화
1991	외환거래소 설립	국영기업 재등록 실험적 주식회사화 감가상각비 100%를 국가에 재집중	중앙은행 차입중지
1992	신한법 제정 외자법 2차 개정	총리령 137호(자연독점 분야, 주요경제 분야외 가격규제 철폐)	국채발행
1993	토지법 개정	파산법 제정	
1994	노동법 제정	기업합동 정책수립	
1995	행정개혁(MPI 신설) 국내투자촉진법	국영기업법 제정 재무부 자산관리국 설치	세제개혁(2단계) -부가가치세 도입검토
1996	외자법 3차 개정	국가증권위원회(SSC) 설립	
1998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발표	국영기업개혁위원회(NERC) 설치 주식화 작업 촉진을 위한 수상결정 44호 공포	중앙은행법 개정시행 Decree on Foreign Credit Institutions('99)
2000	외자법 4차개정	호치민 주식거래소 개설 기업법 제정	
2002	노동법 개정	Decree 64호(베트남인의 국영기업 지분참여 제 한 철폐) Ordinance on Price 발표(가격규제 범위 발표)	

자료: 필자작성

주식화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국가 증권위원회를 설립, 증권시장 개설을 준비하는 등 국영기업 개혁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총리직속의 기업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영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는 총 1,272개의

국유기업이 정리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2003년 이후 3개년간의 시한을 설정하여 현재 국영기업의 절반에 이르는 2,620개사를 구조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대외지향적 산업

회가 설치되고, 1995년 4월에는 국회에서 국영기업법을 제정하였다(World Bank, 1996 참조).



〈표 7〉 베트남의 국영기업개혁 추진계획(2003~05)

	목 표	2003	2004	2005
총 계	2,620	1,515	767	338
주 식 화	1,919	927	676	326
통 합	323	260	55	8
매 각	167	137	26	4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구조로 전환하였다. 1987년 외자법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고(〈표 6〉 참조), 외자유치를 위해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및 공단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있다.<sup>13)</sup> 또한 1995년 ASEAN에 가입하고, 2001년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최근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 농업생산성의 증가와 공업화를 위한 자본축적이 경제개발의 선결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농업 발전, 소비재 생산확대 및 수출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생산 및 투자구조를 재조정하고 있다.<sup>14)</sup> 실제로 농업부문에 있어서 1988년 농업개혁으로 가격인센티브가 적절히 도입되고, 이를 통해 농업생산이 크게 확대되어 1989년 이후 베트남은 연간 수백만 톤의

쌀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제3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원유생산도 급증하여 달러공급에 의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특히 개방이후 연간 수출증가율이 25% 수준에 이르고 있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등 후발성의 이익(advantage of backwardness)에 의하여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외자유치의 성과 및 실적

개혁초기 서방의 경제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기대한 주변국의 진출채도로 베트남은 해외민간자본 유치에 커다란 성과를 기록하였다.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투자유인정책과 제

13)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및 공단개발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율, “체제전환이후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2003. 8. pp. 82~91 참조.

14) Communist Party of Vietnam(1987), pp. 50~55 참조.

15) Riedel, J. and Comer, B.(1997) 참조.

도적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서방의 자금지원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기로 아시아 주변국과 주요 서방선진국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국제금융기관과 주요 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후반 UNDP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IMF는 재정과 경제관리에 있어서 기술적 원조와 함께 정책 조언을 추진해 왔고,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회계정책, 조세개혁과 예산관리 거시경제 통계작성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IMF의 자금지원이 시작된 것은 1993년이고,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약 10.5억 달러(797.4 SDR)를 지원한 바 있다. <표 8>을 보면, 스탠바이 협정을 통해 1993년 1억 9,400만 달러를 1차로 지원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위해 확대구조조정용자(ESAF) 협정이

체결되어 1994년 11월에 4억 8,4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용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원조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급증하였다.<sup>16)</sup> 1993년 '1차 원조국 회의'가 개최된 이래 국제금융기관의 공공차관이 증대되고, 1994년 2월 미국의 경제제제조치 해제로 주요 서방국가들의 지원은 무상원조뿐만 아니라 유상자금협력을 기반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표 9>를 보면, 1993년 3억 달러에 불과하던 원조액이 1998년에는 12억 달러로 4배가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표 8〉 IMF의 지원실적

(백만 SDR)				
	승인시기	만 기	승인금액	(백만 달러)
스탠바이협정	1993. 10	1994. 11	145.0	194.0
ESAF	1994. 11	1997. 11	362.4	484.0
PRGF	2001. 4	2004. 4	290.0	368.0

자료: UNDP

16) 베트남 지원체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원조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CG)이다.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CG는 1993년 결성되어 원조공여국과 베트남 정부간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원조사업 및 주요 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 조정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9〉

외자도입액 현황(1989~98)

(집행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양자간 ODA	274.3	381.2	259.3	279.7	166.4	268.8	344.8	365.5	507.5	695.8
다자간 ODA	44.2	78.3	68.9	66.6	81.4	280.8	256.1	515.3	417.8	467.3
NGO 지원	9.5	7.0	8.0	8.2	10.5	8.2	9.8	9.7	13.3	15.2
ODA 총계 <sup>1)</sup>	328.0	466.5	337.8	335.8	286.5	606.9	610.8	850.5	938.6	1,178.3
FDI 총계 <sup>2)</sup>	100	120	165	333	923	1,631	2,236	1,838	800	700

자료: 1) UNDP, Development Cooperation : Viet Nam, 각년호.

2) World Bank 자료.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개방초기에는 총투자건수나 금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 6월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된 이후인 1991년부터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2년의 경우 3.3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22.4억 달러로 매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이러한 대규모 자금유입을 통해 연 7~8%의 성장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베트남은 개혁노선 채택이후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과 기술,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추구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일차적 경제목표는 안정적인 개방경제체제 수립으로서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기초로 국제시장과 연계된 국내시장의 안정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초 당중앙위원회의 제 10차 회기와 1991년 6월의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사회발전전략(1991~2000)을 채택한 바 있다. 2001년 4월에는 제9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2001~2010년간 경제사회발전전략'과 제7차 5개년 개발계획(2001~05)을 확정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7.5%로 설정하고, 외국재원 조달액을 210억 달러로 하여 FDI 120억 달러, ODA는 90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개혁·개방노선 채택 이후 베트남의 경제협력 대상국은 과거 사회주의국가 중심에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서방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국가별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약 70개국에 이르며, 투자진출의 절대적인 비중은 아시아 주변국과 주요 서방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다.

1988년 이후 2005년 2월까지 실행액기

〈표 10〉 경제성장 및 자원조달 목표

	단 위	6차(1996~2000)	7차(2001~05)
G D P 성 장 륜	%	7	7.5
총 투 자	십억 달러	36	60
국 내 재 원 조 달	십억 달러	19.1	39
외 국 재 원 조 달	십억 달러	16.9	21
외 국인직접투자(FDI)	십억 달러	10.8	12
공적개발원조(ODA)	십억 달러	6.1	9

자료: Government of Vietnam

〈표 11〉 베트남 5대 외국인 투자국가 (1988~2005. 2, 누계기준)

국가명	투자건수	승인액 (백만달러)	실행액 (백만달러)	평균투자금액 (백만달러)	투자비중
싱 가 폴	344	8,002	3,183	9.3	12.3
대 만	1,277	7,346	2,833	2.2	11.0
일 본	503	5,498	4,209	8.4	16.3
한 국	863	4,808	2,706	3.1	10.5
홍 콩	328	3,470	1,945	5.9	7.5
총계(68개국)	5,217	47,157	25,872	5.0	100.0

주: 평균투자금액과 투자비중은 실행액 기준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No. 701(2005. 3. 21일자) 참조.

준으로 대베트남 외국인투자는 총 5,217건, 258.7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12.3%), 대만(11.0%), 일본(16.3%), 한국(10.5%), 홍콩(7.5%) 등으로 아시아 주변국들이 전체 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베트남 투자유치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 북한에 주는 시사점

### 1. 이행속도와 추진방식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빅뱅식의 동구모델, 점진주의에 입각한 중국모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과잉노동경제로서의 개도국형 체제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의 개혁·개방체제는 '이행과 개발의 문제가 중첩'됨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IMF 지원체제하에서 외자주도형 성장정책과 Small Bang 방식의 이행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점은 개혁이전 구소련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중국에 비해 매우 높았고, 개혁노선 채택이후에는 경제개발의 동력을 외

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가격자유화는 1989년을 전후로 급속히 추진되었고, 체제전환과정에 있어서 가격자유화와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화정책은 개혁초기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물가안정 및 재정·통화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구조조정의 핵심인 민영화문제에서는 제반 제도적 미비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을 취하는 개도국형 체제전환의 기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영화정책에 있어서 베트남은 동구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과정에서 추진되던 사유화증서(voucher) 매각 등과 같은 민영화 방안보다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보조금 철폐 및 국영기업 정리 등 국영기업의 체질강화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광범위하게 잔존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국영부문의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민영화를 적극화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미성숙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한편, 제도적으로 국영부문에 대한 제반 우대조치가 남아 있어 비국영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Small Bang 방식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은 개혁초기의 급진적 개혁방식이 경제적 초기조건과 발전

단계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점차 점진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중국과 유사하게 국영기업 민영화가 지연되는 등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제약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전제로 한 베트남의 개혁정책 추진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혁초기 시장부재의 상황에서 경쟁주체와 경쟁원리가 작용하는 시장기능의 육성과 발전에는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의 계획경제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잔존해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급진적 처방으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 경제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계획경제에 기초한 구제도를 급속히 파괴시켜도 시장경제를 지탱해갈 신제도가 곧 바로 구축될 수 없는 상황하에서 급속한 자유화와 시장원리의 도입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혁 초기단계에서 북한은 체제안정을 우선과제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의 순서를 고려하면서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선 북한이 개혁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성

을 전제로 소유제도 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혁초기 제도구축과 시장형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제반 제도가 정비되어 시장경제체도가 정착할 때까지 국영부문에는 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진주의적 개혁론이 주장하는 미시적 제도개혁의 선행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업국가형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개혁·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은 베트남과는 다소 다른 양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업부문의 비중이 높고, 국영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혁이 확대될수록 국영기업 민영화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갈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 개방과 개혁을 분리하려는 유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개혁의 진로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2002년 북한의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수준과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sup>17)</sup>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7·1 경제조치는 북한의 향후 진로와 전망을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신경제정책(1980~82) 및 그에 뒤이은 가격, 임금, 화폐개혁(1985)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이 전면적인 개혁노선을 채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당시의 경제시스템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보조금제도가 온존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국영기업 개혁조치가 도입되었으나 결국 경제불안정으로 귀결됨에 따라 1983년 이후 중앙계획경제노선이 강화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보수화의 영향으로 다시 민간상업활동은 위축되고, 농업부문의 집단화 작업이 강화되기도 하였다.<sup>18)</sup> 즉, 1985년 6월 제4기 8차 중앙위원회 총회 결정에 의하여 가격 및 임금개혁에 착수하여 식료품 가격이

17)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향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물가, 임금, 환율 등의 가격 현실화와 함께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국가계획의 분권화와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농민시장”에서 공업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기능을 확대한 “종합시장”으로의 개편이 시도되었고, 공장, 기업소 등의 구조조정과 기업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8) Ngo Vinh Long(1988), pp. 164~165 참조.

대폭 상승되고, 국영기업 노동자에 대한 저가격의 현물배급제도가 폐지되었다.<sup>19)</sup> 그러나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상당부분을 기업이 화폐임금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지불액이 급증하게 되고, 이것은 제품비용의 상승으로 가격을 앙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금융의 증가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물자배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불과한 상황 이어서 물가급등은 보다 심화되었다. 금융이 재정에 종속되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통화발행에 국한됨에 따라 신경제정책에 의해 농업생산자에 대한 소득재분배정책은 재정의 부담을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이 부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통화가치도 급속히 저하되어 공식환율이 암시장 환율에 근접하게 되어 수백%에 이르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소비자가격 보조금을 폐지하여 극심한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인상하여야 했다.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영기업은 정부로부터 계속 자금대출을 받아야 했으며, 따라서 재정적자는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1985년에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구통화를 10:1의 비율로 신통화와 교환해 주었는데, 일정액 이상은 교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권내로 화폐를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교환하고 남은 돈은 상당기간 은행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유통량은 줄어 들었지만 금이나 달러의 보유는 줄지 않아 개인의 유동성자산 보유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국영기업의 유동성자산을 고갈시켜 정부가 국영기업의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개인 유동성자산 감소노력의 실패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수요를 억제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는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전례없는 인플레이션이 곧바로 뒤따랐다. 더욱이 급격한 물가상승(hyperinflation)으로 인한 예금가치 폭락은 저축을 감소시켜 외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정부예산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근로자의 실질임금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부문의 최종생산물 계약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쌀 생산이

19) 그동안 현물배급되던 품목은 쌀, 고기, 생선, 생선장, 설탕, 조미료, 소금, 연료, 옷감 등으로 1985년 하반기에는 생필품 배급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같은 베트남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한 채 국영기업 주도로 추진하던 사회주의 공업화노선에서 선회하여 ‘실리사회주의’를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구조적인 측면의 불안정성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도입한 일련의 조치는 기존 물자 배분체제를 유지하면서 생산증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혁조치로서 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고,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에 의해 재정적자를 누증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물자분배제도와 보조금제도가 온존하는 연성예산제약 하에서 부분적인 개혁조치는 오히려 재정적자를 누증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거시경제 불안정을 초래하는 국내적 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북·미관계의 악화와 주변정세의 긴장으로 대내적인 경제 불안정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2004년 신년사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 인프라 및 기간산업으로 대변되는 선행부문의 확충, ② 경제와 과학 기술 연계 확대, ③ 농업 및 소비재생산 확대, ④ 실리중시의 경제관리조치 확대 및 내각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

하고자 하나, 부분적인 개혁조치의 한계에 직면할 경우 전면적인 개혁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05년 신년사설에도 선행부문 및 경공업은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원칙하에 경제관리의 실리와 효율성을 중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7·1 조치 이후 경제관리방식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경제개혁조치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보다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강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20)</sup>

북한당국의 경우 공식부문의 정상화를 통해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함으로써 분권형 계획경제체제를 추진하려고 하나, 대외환경의 악화로 7·1 조치가 큰 효과가 없자 국가재정확보를 위해 추가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토지사용료 징수(2002.8), 경제특구신설(2002.9), 종합시장 개설(2003.3), 공채발행(2003.5) 외에도 물자교류시장 및 외화교환소 설치(2003.6)가 이미 추진되었고, 2004년 1월에는 농업부문의 가족단위 영농과 공업부문의 기업개혁 조치도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7·1조치 이후 정책변화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변화가 동시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북한경제

20) 홍익표, “북한신년사에 나타난 2005년도 경제정책 평가”, 『KIEP 세계경제』, 2005. 2. p. 51 참조.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개혁조치로 인플레이션 및 환율급등, 빈부격차 심화, 부정부패 심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증폭되면서 경제혼란이 확산되고 있다.<sup>21)</sup> 계획의 효율화, 혹은 유도형 계획경제로의 변화로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계획경제체제의 한계, 개혁의지의 불투명, 소유권 및 가격정책의 제한성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긴장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어 심각한 재정난과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중앙집권화로의 회귀 혹은 보수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시작된 경제자유화 조치를 돌이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구조적으로 전면적인 개혁·개방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된다. 특히 정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급속한 개혁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원동원에는 한계가 있고, 남북협력 및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입이 필수적이다.

### 3. 자원조달

북한의 경제개혁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개방노선과 경

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그동안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베트남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 개방모델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원활한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경제난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서 내帛경제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베트남이 개혁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바와 같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해외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핵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서방자본과 국제금융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IMF나 세계은행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조달방식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자문그룹(CG)방식이 개발재원 규모면이나

21) 7·1 조치 이후 물가급등 현상을 살펴보면, 곡물 5~8배, 육류 4~7배, 의류·가전제품 등은 2~7배 상승하고, 암시장 환율은 2002년 8월 당시 1달러당 25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통일부,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2005. 3 참조).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 개혁노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라오스의 원탁회의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특정 목적을 위해 신탁 기금방식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경우라도 남북한 경제협력이 기본적으로 ‘민족경제의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이행, 개발, 남북통합이라는 복잡한 연계 속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협력모델 또한 안정적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제약요인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한 경험차원에서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험초기부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로선 경험자금의 수요가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해외자금의 유치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Concessional Aid)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으로서는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규모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방안 마련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창구로서 우리정부 주도로 ‘경제지원협의체’를 구성·발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변 4강, EU,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보다 신축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우리정부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세계은행으로 하여금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 율,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_\_\_\_\_,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1999.
- \_\_\_\_\_, “베트남 국영기업의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제1호, 한국베트남학회.
- \_\_\_\_\_, “미·베트남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베트남연구』 제2호, 한국베트남학회.
- \_\_\_\_\_, 『ASEAN 주요국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4.
- 권율·조명철·이철원·김은지,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이 근, 『중국경제구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통일부,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2005. 3.
- 한국비교경제학회편, 『비교경제체제론』, 박영사, 1997.
- 홍익표, “북한신년사에 나타난 2005년도 경제정책 평가”,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조동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역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3.
- 大野建一, 『市場移行戰略』, 有斐閣, 1996.
- 大野泉, 『市場經濟への移行と開發の課題』, 『開發援助研究』 Vol. 2, No. 1, 1995.
- 竹內郁雄, 『ドイモイ下のベトナムの國營企業』, 『アジア經濟 第33卷 3號』, アジア經濟研究所, 1992.
- 竹內郁雄·村野勉編, 『ベトナムの市場經濟化と經濟開發』, 研修双書 No.462, アジア經濟研究所, 1996.
- Blanchard, O., Dornbusch, R., Krugman, P., Layard, R., and Summers, L., Reform in Eastern Europ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1.
- Communist Party of Vietnam, 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1987.
- Fisher, S. and Gelb, A.,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 Kerkvliet, B. J. and Porter, D. J., Vietnam’s Rural Transformation, Westview Press, 1995.
- Konai, J.,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 North Holland, 1980.
- Lavigne, M., The Economics of Transition, MacMillan Press, 1995.
- Lepiziger, D. M., Awakening the Market: Viet Nam’s Economic Transition,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157., 1992.
- Lewis, 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r”, The Manchester

- School, 1954.
- Lipton, D. & Sachs, J. D.,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0.
- McKinnon, R. I., The Ord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Financial Growth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n China, 1978-1992 : Implications  
for Russia and Other Transitional Econom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No. 3., 1994.
- McMillan, J. and Naughton, B., "How to Reform a Planned Econom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4, No. 3., 1993.
- \_\_\_\_\_, Reforming Asian Socialism,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 Naughton, B., "What is Distinctive about China's Economic Transition? State Enterprise  
Reform and Overall System Trans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No. 3., 1994.
- \_\_\_\_\_, "Distinctive Feature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Vietnam", Reforming Asian  
Socialism, McMillan, J. and Naughton, B.(ed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 Ngo Vinh Long, "Some Aspects of Cooperation in the Mekong Delta", David G. Marr &  
Christine P. White(eds),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Cornell University, 1988.
- Raiser, M., Soft Budget Constraint and the Fate of Economic Reforms in Transition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ubingen, 1997.
- Rozelle, S., "Gradual Reform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 The Key to Success of China's  
Agricultural Reform", Reforming Asian Socialism, McMillan, J. and Naughton,  
B.(ed.),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 Rybczynski, T. M., "The Sequencing of Reform",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7,  
No. 4., 1991.
- Sachs, J. D. and Woo, W. T., 1994, "Experience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No. 3.

State Planning Committee, Strategy for Socioeconomic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up to the Year 2000, Hanoi, 1991.

Vietnam Government Report,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Requirements for the Five Years 1996-2000, Hanoi, 1995.

Vu Tuan Anh, Vietnam's Economic Reform: Results and Problems, Social Science Publishing House, Hanoi, 1994.

Woo, W. T.,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8, No. 3., 199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 From Plan to Market, 1991.

\_\_\_\_\_,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 Form Plan to Market, 1996.

\_\_\_\_\_, Vietnam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Delivery of Rural Services, 1996.

\_\_\_\_\_, Vietnam Deeping Reform for Growth, 1997.